

충남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학습인프라 실태 분석

송두범 | 충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부장

I. 서론

지금까지 노동력과 자본이 기존사회의 개발을 주도하였다면, 향후 21세기에는 지식과 정보화가 중심이 된 지식기반정보사회로 그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즉, 종래의 자본, 노동력, 자원 등에 좌우되던 산업사회에서 창의적 지식에 의해 좌우되는 지식기반사회로 변함에 따라 인적자원의 양과 질이 그 나라의 경쟁력은 물론 사회구성원 각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되었다.

특히 1999년 8월 ‘평생교육법’과 2002년 8월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제정으로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법적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국민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관리·활용하느냐는 문제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현재 평생교육법 제정에 따라 중앙에는 국가수준의 평생교육센터, 16개 각 시·도에는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그리고 각 시·군·구 단위 지역에는 평생학습관이 평생교육 전담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적자원개발 또한 국가 핵심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지역안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요소를 다양하게 포괄하고 있는 국가단위보다 동질성과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단위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소극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지역발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인식에 기초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적·물적 평생학습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지역학습공동체(Learning Community) 구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200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주민의 학습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활동을 지원함으

로서 개인과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정치적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분포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인적자본을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구체적 방안으로 최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의 가케가와시가 세계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한 이후 중앙정부가 평생학습도시 시범시를 지정하여 조성사업을 벌인 지 30여년 만에 140여 개의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여 사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Nottingham, Liverpool에서 Thetford, Batley까지 40여개 학습 도시와 학습타운을 선언·발전시켜 현재는 다양한 학습마을/학습도시를 연대하는(Learning City Network) 방향으로 가고 있다. OECD의 학습도시 사례연구 보고서는 지식기반 경제시대를 맞아 도시 및 지역에서 의 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 등을 증진시키는데 평생학습도시 운영이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금산군(2004년)과 부여군(2005년)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부족하였다. 평생학습도시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반이 되는 평생학습 인프라에 대한 실태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충

청남도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의 기반인 평생학습 인프라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충청남도 각 시군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 평생학습인프라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요건중의 하나인 평생학습 인프라 즉, 평생학습기반기관 및 시설, 평생학습프로그램, 평생학습기관 종사자, 평생학습 추진체제 등에 대한 현황 및 실태분석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정책에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 및 대응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평생학습도시의 의의

평생학습도시는 1979년 일본의 가케가와시에서 선언한 이후 1992년 Gothenburg시에서 개최된 OECD회의가 새로운 도화선이 되어, 영국, 스웨덴,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약 140여개, 영국은 46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있다. 현재 평생학습도시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OECD 주도하에 범세계적인 학습운동으

로 확산되고 있다. 학습도시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학습기회는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의 다양한 대상과 문화, 환경, 자치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제공되며,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내용의 학습기회 제공에 있어서 예산투입과 행정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진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는 지식기반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도시와 지역사회에서의 학습, 생산성, 혁신, 경제 등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되었으며, 행정 및 정치가들이 추진해야 할 주요 아젠다로 인정받고 있다(변종임, 2005 : 17-18).

평생학습도시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크기와 규모에 상관없이 시(city), 읍(town), 또는 지역사회(communit)단위에 사용된다. 즉 평생학습도시란 ‘사회통합과 변형, 개인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의 학습자원을 동원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발전시키는 도시’(Norman Worth, 1999), ‘지역사회의 통합과 활성화, 경제발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의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도시’(www.lifelonglearning.co.uk)로 정의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생학습도시를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Restructure)운동”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지역사회교육 운동”으로 이해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2004).

Norman Longworth(1997)는 ‘학습도시(lifelong learning city)란 기본적인 변형, 사회안정, 개인의 행복에 있어서 학습이 열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융자원을 동원하는 도시’로 정의한다. 학습도시는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확대 지원과 학습을 이용한 사회적·경제적 재생에 목적을 두고 있다(LCN, 2000 ; 변종임, 2005 : 17에서 재인용). 따라서 학습도시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 국가간 연계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2. 평생학습도시 추진배경

한국에서는 1994년 창원시에서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광명시가 한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정부는 평생교육의 세계 흐름에 부응하여 2000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였으며,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정책을 통해 지역의 경제적 발전·사회적통합·도시경영 합리화·학습공동체 형성 등을 기대하고 있다(김남선, 2004 : 16).

우리나라 교육인적자원부(2004)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역할 증대와 학습공동체 조성에 대한 요구이다. 정보화의 발달로 국가발전에 있어 지역사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한 지역단위 학습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지역사회공동체가 형성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역인적자원개발 촉진이다.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인적자원개

발(NHRD)의 기반구축과 국가발전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한 지자체·교육청간의 공동협력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평생학습도시 추진현황

우리나라는 ‘평생학습종합진흥계획’에 의거하여 2001년부터 2006년 현재 전국 57개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필요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인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선정 신청의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정지역의 수도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평생학습도시의 선정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신청 및 선정 결과

구 분	프로그램 내용	비고
2001	대전 유성구, 경기도 광명시, 전북 진안군	3곳
2002	부산 해운대구, 경기도 부천시, 제주도 제주시	3곳
2003	제주도 서귀포시, 전남 순천시, 경북 안동시, 인천 연수구, 경남거창군	5곳
2004	전북 전주시, 충남 금산군, 경기도 이천시, 전남 목포시, 충북 청주시, 경북 칠곡군, 서울 관악구, 경남 창원시	8곳
2005	서울 양천구·성북구, 대구 동·달서구, 인천 부평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구리시, 충북 단양군 및 제천시, 충남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남 남해군 및 김해시	14곳
2006	서울 영등포구, 부산 연제구, 인천 남구, 광주 동구·광산구, 울산 울주군, 경기 안산시·용인시·시흥시·평택시, 강원 삼척시·화천군, 충북 진천군, 충남 서산시·아산시·태안군, 전북 김제시·남원시·정읍시, 전남 여수시·광양시·곡성군, 경남 양산시·하동군	24곳

1) 학습공동체는 학습을 통한 변형, 통합성,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킹 학습사회를 의미한다. 학습공동체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지역사회 주인의 요구를 찾아내고, 학습의 가치에 대한 문화적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와 제도적 관계의 강점을 활용한다. 학습공동체는 지역 사회의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사회적 결속, 재생,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방편으로서 학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Yani, 2000).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첫 해 2억원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을 받으며, 이듬해부터 경쟁을 통해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특별지원을 받고 있다. 우수 프로그램 지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지역에만 이루어지며, 지역별 평균 약 5천만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김남선, 2004 : 13).

그동안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통하여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04년도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한 순천시는 시청조직에 평생학습지원과를 설치하고, 시 예산의 5%를 교육에 투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있으며, 부천시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교육전문가와 시청 공무원이 공동·협력하여 지역사회공동체 중심의 평생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금산군은 평생학습을 시정의 주요테마로 채택하여 시정 제반 영역을 평생학습을 통하여 활성화시키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평생학습도시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색사업개발에 부심하고 있다.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애용하였던 주제들로는 ‘정보’, ‘문화’, ‘환경’, ‘교육’, ‘생명’, ‘경제’ 등 다양하지만, 최근에는 ‘학습’으로 모아지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평생학습도시를 표방하는 것도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건설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광명시가 1999년 3월 9일 평생

학습도시를 선언함으로써 평생학습 공동체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창원시, 군포시, 김해시, 진해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장 지역적인 평생학습이 가장 세계적인 평생학습이며, 평생학습세계의 건설은 평생학습마을 및 도시 건설로 출발한다는 점에서 세계화와 지방화가 공존하는 현 단계에서 평생학습사회 및 평생학습세계 건설의 초석을 지방자치단체가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도시를 컨셉으로 잡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신원득 외, 2000 ; 신경희, 2001 ; 양병찬 외 2001).

20세기 새마을 운동은 21세기 학습마을 운동으로 계승발전한다. 특색있는 지방자치단체 건설, 지역을 살리는 지름길은 평생학습마을 조성에 있다. 지역사회 재생 및 부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평생학습마을 조성운동에 주목한다. 지역과 교육적 만남은 평생학습마을 조성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끌어 올리고 투자를 유치하는 지름길은 평생학습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기 때문이다(이희수, 2002 : 17-18).

하나의 도시를 평생교육체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지원 시스템의 구조도 포괄적으로 요구되는데, 평생학습에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 면에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일반행정, 종합행정, 복지행정, 주민자치 서비스의 일환으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축이라면, 주로 교육행정라인

면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축이 형성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전담·지원 추진 서비스 제공 면에서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이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도시가 앞에 제시한 추진 단계를 거치면서 향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평생학습추진체제간의 연계·협력에 대한 영역이다.

5. 외국 평생학습도시 사례 시사점

첫째, 영국은 평생학습도시에 대하여 종합적 접근을 하고 있다. 영국의 평생학습도시는 지역개발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문제를 조망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독일의 지역개발 및 평생학습체제를 위한 정책수립은 철저히 지역의 행위주체와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지역 스스로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평생학습체제를 구성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역문제해결의 열쇠는 지역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되고, 지역의 활동주체들이 합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일본은 학습도시만들기를 통해 지방정부와 주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다. 산촌지역인 가케가와시는 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도시만들기에 평생학습운동을 도입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의식과 관심을 변화시킴으로써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지역의 인적자원으로서 적극적인 주체가 되어 지역 경제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2〉 외국 평생학습도시의 특징비교

국 가	주요 특징
영 국	•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이 핵심 - 40여개 도시와 타운에서 학습도시, 학습타운 선언 - 개인과 고용주들의 학습참여 지원/ 동기유발
덴마크와 스웨덴	• 학습지역 건설을 통해 기업 혁신 -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체가 주도되어 학습운동 - 경제적 소득 창출, 지역공동체 형성
독 일	•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업교육, 직업계속교육 강화 - 지역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통합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의 추진 - 학습도시는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고용촉진의 핵심열쇠
일 본	• 시민학습을 촉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 평생학습도시의 나라 : 지역재생, 평생학습촉제 - 평생교육관련 공적 시스템의 완비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 2005년도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설명회, 회의자료, 2005, p35.

6. 국내 평생학습도시 사례 시사점

1)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의 부족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과 교육장, 기타 행정기관 관계자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산업개발 등과 같이 하드한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교육과 같은 소프트한 방법을 통한 지역발전에 대한 확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평생학습도시가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 정도는 그간 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의 기제로 활용한 개발기법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장성아카데미”와 같이 일찍부터 공무원과 주민의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역발전 기제로 활용한 자치단체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건설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시 공감대 형성 및 주민의 수용정도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평생학습도시로 가기 위한 선행경험 부족

최근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증대로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다

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은 도시주민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가 정비되어 모든 학습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학습지원시스템 등의 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학습시설 및 학습시스템 측면에서 선행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나 평생학습도시의 선행조건으로 대규모 학습시설의 신축 등과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선행경험과 계획이 부족한 상태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평생학습도시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어 모든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3) 평생학습도시내 평생교육기관간 유기적 연계협력 취약

지역사회 내에서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킹은 평생교육 현장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서 개별 기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실무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서 함께 교육받고 학습하며 그리고 정보의 교환을 통해서 기관이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터전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내 평생교육기관간의 연계·협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평생교

육 기관이 영세하고,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즉, 지역의 사회복지관, 도서관, 문화회관, 주민자치센터의 교육프로그램들간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각 기관들이 단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지역민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습실이나 체험활동 장소 등이 없거나 부족하고, 가능한 시설이 산재한 경우에도 유관기관 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정조직의 문제가 있다.

4) 평생교육기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부족

평생학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기존의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의 전문가(평생교육사)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 업무는 주요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비전문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평생교육기관 운영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기관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나 다양한 교육방법의 선택 등에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면단위 지역의 경우 효과적 평생학습의 추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과 학교 간의 공동체적 관점에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의 제반 문제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실적으로 학교는 학교대로 학교교육 위주의 운영과 지역민

은 학교 밖에서 겹돌고 있는 의사소통의 부재가 현실이다.

5)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의 관리 부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 체계적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 지정 전과 같이 활발한 평생학습이 전개되지 않은 자치단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자치단체의 주도로 평생학습도시로의 지정은 가능하겠지만, 평생학습의 이념이 지역사회에 실현되어, 주민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는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지역사회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사회주민이나 자치단체로서는 매력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추진해왔던 의도적인 노력들에 비해, 지정 이후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관리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개요

조사대상은 16개 시군별 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154개 기관을 표본추출.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학습인프라 실태조사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88개 기관으로 회수율은 56.4%를 나타내었다.

조사범위는 충남 16개 시군 전역 평생교육시설이며, 조사기간은 2005년 6월 10일부터 6월 25까지 15일간이 소요되었고, 조사방법은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문항수는 총 48문항(기관의 성격 6문항, 기관의 운영현황 8문항,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8문항,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8문항, 교육시설 및 장비 8문항, 운영상 애로사항 8문항, 정책상 요구사항 2문항)이었으며, 설문지 형태는 명목척도와 서열척도를 혼용하였다.

설문조사 및 분석절차는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후, 코딩작업을 실시,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실태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표집 규모 및 회수율

항 목	표집규모	응답규모	비율(%)
천안시	30	16	53.3
공주시	21	10	47.6
보령시	10	4	40
아산시	18	12	66.6
서산시	9	6	66.6
논산시	17	10	58.8
계룡시	0	0	0
금산군	7	6	85.7
연기군	7	3	42.8
부여군	5	3	60
서천군	4	3	75
청양군	4	3	75
홍성군	9	4	44.4
예산군	5	2	40
태안군	3	3	100
당진군	5	3	60
계	154	88	57.1

소재지에 있어서 표집응답규모로 천안시 16개 기관, 아산시 12개 기관, 공주시, 논산시 각각 10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비율로는 태안군 100%, 금산군 85.7%, 서천군, 청양군 각각 75%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성격은 학교평생교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청소년평생교육기관, 여성평생교육기관, 노인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문화시

설 중심 평생교육기관, 일반평생교육시설, 연수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표집응답규모로는 공공평생교육시설 46개 기관, 학교평생교육시설 15개 기관, 문화원 9개 기관 순으로 나타났고, 응답비율로는 연수기관 100%, 학교평생교육시설 78.9%, 직업훈련기관 71.4%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기관성격

항 목	표집규모	응답규모	비율(%)
학교평생교육시설	19	15	78.9
직업훈련기관	7	5	71.4
노인평생교육기관	9	3	33.3
사회복지기관/시설	23	7	30.4
청소년평생교육기관	4	0	0
문화원	17	9	52.9
연수기관	3	3	100
공공평생교육시설	72	46	63.8
계	154	88	57.1

평생교육기관 인프라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도구는 평생교육기관의 성격, 기관의 운영현황,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교육시설 및 장비, 운영상 애로사항, 정책상 요구사항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5〉과 같다.

〈표 5〉 조사도구 : 설문지

조사영역	조사문항	번호	소계	비고
기관의 성격	소재지	1	6	명목
	설립년도	2		
	기관성격	3		
	설립·운영주체	4		
	교육내용	5		
	교육대상	6		

〈표 5〉 조사도구 : 설문지

조사영역	조사문항	번호	소계	비고
기관의 운영현황	기관의 인력	7	8	명목
	운영재원	8		
	재무 보유액	9		
	월평균 유지비	10		
	월평균 교육인원	11		
	월평균 수강료	12		
	가장 큰 지출항목	13		
	홍보방법	14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법	15	8	명목
	요구분석 실시여부	16		
	만족도 조사 실시여부	17		
	강의평가 반영여부	18		
	시장조사 실시여부	19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 여부	20		
	교육프로그램 개선빈도	21		
	교육방법	22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직원채용방법	23	8	명목
	실무자 연수	24		
	강사 선정기준	25		
	강사교육 실시	26		
	강사수급방법	27		
	강사처우(시간당 강사료)	28		
	자원봉사자 활용	29		
	자원봉사자 활용방법	30		
교육시설 및 장비	교육시설 형태	31	8	명목
	강당 유무	32		
	실습실 유무	33		
	자료실 유무	34		
	상담실 유무	35		
	인터넷 전용선 유무	36		
	휴게실 유무	37		
	교육용 기자재	38		
운영상 애로사항	예산·재정	39	8	서열
	시설·장비	40		
	인력관리	41		
	기관홍보	42		
	지역사회내 타기관간 협력 및 연계	43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44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45		
	교육프로그램 개발	46		
정책상 요구사항	지원사항	47	2	명목
	행정주체	48		

IV. 조사결과 및 해석

1. 기관의 일반배경 특성

충남지역 평생교육기관 인프라 실태를 파악하고자 실태조사용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7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설문지를 토대로 기관 특성별, 운영주체별, 운영

재원별에 따라 각 문항별로 교차분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류된 7가지 영역은 기관의 성격, 기관의 운영현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실태,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교육시설 및 장비, 운영상 애로사항, 정책상 요구사항 등이다.

또한 이상의 영역별 내용 분석을 위한 기관의 배경 특성으로는 기관특성, 운영주체, 운영재원의 3가지 변인을 설정하였다(〈표 6〉참조)

〈표 6〉 기관의 일반적인 배경 특성

구 분	항 목	빈도(기관수)	비율(%)
기관의 성격	학교평 생교육시설	15	17.0
	직업훈련기관	5	5.7
	노인평 생교육기관	3	3.4
	사회복지기관/시설	7	8.0
	문화원	9	10.2
	연수기관	3	3.4
	공공평 생교육시설	46	52.3
	계	88	100.0
설립· 운영주체	정부· 지자체설립운영	50	56.8
	정부· 지자체설립 및 민간위탁운영	6	6.8
	종교단체 설립운영	1	1.1
	민간비영리단체설립운영	13	14.8
	학교부설기관	16	18.2
	기타	2	2.3
	계	88	100.0
운영재원	보조(국·고, 지방자치단체)	67	76.1
	자체기금조성(후원금)	3	3.4
	교육수강료	13	14.8
	기타	5	5.7
	계	88	100.0

2. 기관운영 현황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내용, 교육대상, 기관의 인력(정규직, 비정규직, 자원봉사자), 재무보유, 월 평균 유지비, 월 평균 교육인원, 월 평균 수강료, 지출항목, 홍보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교육내용은 기초·교양교육이 34.1%, 취미여가교육이 33%를 차지, 교육대상은 주부·여성이 5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대부분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들이 주부·여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관의 인력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 11~20명 이하가 63.6%, 46.6%를 차지, 자원봉사자는 10명 이하가 64.8%를 차지하고 있었다. 재무보유는 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6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월평균 유지비는 500만원 미만이 53.4%, 월평균 교육인원은 200명 이상이 39.8%, 월평균 수강료는 1만원 미만이 51.1%, 지출항목은 인건비가 67%, 홍보방법은 전단/포스터/현수막이 4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3.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

평생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방법, 요구분석, 만족도 조사, 강의평가 반영, 시장조사, 프로그램 의견교환, 프로그램 개선빈도, 교육방법 등에 대한 사항들을 파악하였다.

프로그램개발방법은 내부 직원이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다고 응답한 기관 55.7%, 요구분석은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학습자 요구분석을 실시(70.5%)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58%, 강의평가를 반영하고 있는 기관 67%,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 43.2%를 차지하고 있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기관 운영자, 교·강사, 학습자 간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교환에 대한 조사결과는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기관운영자, 교·강사, 학습자 간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94.3%)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선한다는 경우가 3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년 마다 개선(27.3%), 거의 개선하지 못한다(14.8%), 연2회 정도 개선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주된 교육방법은 강의법(61.4%), 실습·실습법(33%)의 순으로 나타났다.

4. 평생교육관련 인적자원

평생교육기관의 인적자원 활용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직원채용방법, 실무자연수, 강사선정 기준, 강사교육실시, 강사수급방법, 강사처우, 자원봉사자활용, 자원봉사자활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기관의 직원채용 방법을 조사한 결과는 기타(40.9%)와 공모(37.5%)순으로 나타났는데 기타가 많은 결과는 공공평생교육시설의 경우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발령의 방식으로 직원의 채용과 충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평생교육 실무자를 위한 연수는 조사대상 기관의 48.9%에 해당하는 기관이 거의 실시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의 선정기준은 담당교과의 전문성 항목이 81.7%, 강사교육은 조사대상 기관의 54.5%에 해당하는 기관이 거의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수급방법은 아는 사람의 소개(37.5%)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모(22.7%)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평균 강사료는 2~3만원 미만(35.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3~4만원 미만(22.7%), 1~2만원 미만(21.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원봉사자 활용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관(46.6%)보다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53.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자 활용방법은 교육프

로그램 진행보조(39%)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단순한 사무보조(29.3%), 교육프로그램 기획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17.1%) 순으로 나타났다.

5. 교육시설 및 장비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장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육시설형태, 교육시설 및 장비유무(강당, 실습실, 자료실, 상담실, 인터넷 전용선, 휴게실), 교육용 기자재 유무(대형TV, 빔 프로젝터, VTR, OHP, 교육용PC)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육시설의 형태는 조사대상의 77.3%에 해당하는 기관이 교육시설을 자체소유하고 있다고 응답, 임대시설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9.1%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내부시설 설치 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 먼저 강당 설치 현황은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64.8%)이 그렇지 않은 기관(35.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실 설치현황은 실습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8%)이 그렇지 않은 기관(42%)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실 설치 현황은 자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0%)과 그렇지 않은 기관(50%)이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상담실 설치 현황은 상담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3.4%)이 그렇지 않은 기관(46.6%)보

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전용선 설치 현황은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81.8%)이 그렇지 않은 기관(18.2%)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인 흐름이 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휴게실 설치 현황은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59.1%)이 그렇지 않은 기관(40.9%)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교육용 기자재 현황을 조사해 보았는데 대형TV 보유 현황은 대형TV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37.5%)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62.5%)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빔프로젝트 보유 현황은 빔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40.9%)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59.1%)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 보유 현황은 비디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27.3%)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72.7%)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HP 보유 현황은 OHP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25%) 보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75%)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용 PC 보유 현황은 교육용 PC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43.2%) 보다 보유하고 있는

기관(56.8%)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운영상 애로사항

평생교육기관의 운영상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예산·재정, 시설·장비, 인력관리, 기관홍보, 지역사회내 타 기관간 협력 및 연계,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8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전체적인 조사결과는 <표 IV- 7>과 같다. 전체 항목들 중에서 '매우 어렵다'에 해당하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시설·장비(19.3%),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15.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이나 타기관 협력 및 연계 항목에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음'과 '별로 어렵지 않음'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시설·장비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운영상 애로사항 (단위 : 수, %)

구 분	항 목	빈도(기관수)	비율(%)
예산·재정	전혀 어려움이 없음	3	3.4
	별로 어렵지 않음	8	9.1
	보통이다	28	31.8
	대체로 어려운 편임	37	42.0
	매우어렵다	12	13.6
	계	88	100.0

구 분	항 목	빈도(기관수)	비율(%)
시설·장비	전혀 어려움이 없음	8	9.1
	별로 어렵지 않음	8	9.1
	보통이다	37	42.0
	대체로 어려운 편임	18	20.5
	매우어렵다	17	19.3
	계	88	100.0
인력관리	전혀 어려움이 없음	4	4.5
	별로 어렵지 않음	11	12.5
	보통이다	44	50.0
	대체로 어려운 편임	16	18.2
	매우어렵다	13	14.8
	계	88	100.0
기관홍보	전혀 어려움이 없음	4	4.5
	별로 어렵지 않음	15	17.0
	보통이다	47	53.4
	대체로 어려운 편임	18	20.5
	매우어렵다	4	4.5
	계	88	100.0
타기관간 협력 및 연계	전혀 어려움이 없음	7	8.0
	별로 어렵지 않음	23	26.1
	보통이다	40	45.5
	대체로 어려운 편임	13	14.8
	매우어렵다	5	5.7
	계	88	100.0
정책 결정자의 이해 및 관심	전혀 어려움이 없음	13	14.8
	별로 어렵지 않음	37	42.0
	보통이다	31	35.2
	대체로 어려운 편임	6	6.8
	매우어렵다	1	1.1
	계	88	100.0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전혀 어려움이 없음	4	4.5
	별로 어렵지 않음	14	15.9
	보통이다	37	42.0
	대체로 어려운 편임	19	21.6
	매우어렵다	14	15.9
	계	88	100.0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혀 어려움이 없음	3	3.4
	별로 어렵지 않음	18	20.5
	보통이다	36	40.9
	대체로 어려운 편임	19	21.6
	매우어렵다	12	13.6
	계	88	100.0

7. 정책상 요구사항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나 지원기관의 지원요구사항, 행정적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다.

정부나 지원기관에서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항은 재정적인 지원이 40.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평생교육체제가 지역수준에서 구축되기 위하여 어느 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는 평생교육 전담기관이 행정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1.1%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8.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 본 평생학습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평균 교육인원에 비해 재무보유 측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점이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충남도민의 월평균 교육인원은 기관성격별, 설립·운영주체별, 운영재원별로 살펴보았을 때 39.8%가 200명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평생교육기관이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기 위함이 목적이려면 평생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둘째,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은 56.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요조사에 있어서 정부·자자체 설립운영의 경우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거의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요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실무자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실무자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기관이 48.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보다 자체적으로 기금조성과 교육수강료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 보다 실무자 연수를 충실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의 실무자들이 연수를 충실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요청이 요구된다.

넷째, 평생교육기관의 운영과 평생교육기관 구축의 바탕이 되는 교육시설 및 기자재가 열악하다는 점이다. 교육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면에서 강당, 실습실, 자료실, 상담실, 휴게실, 교육용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과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평생교육기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때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에서는 학습자 요구조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는 있지만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기자재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V.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교육내용 및 대상의 확장이다. 평생교육기관은 교육내용에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의 기초 및 교양교육, 취미 및 여가교육 뿐 아니라, 직업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습득 등의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교육대상 또한 여성에서 탈피하여 청소년, 노인계층도 적극적으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자 활용체계 구축 및 다양한 홍보방법 도입이다. 평생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원봉사자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관홍보를 위해서는 기관자체 홍보와 아울러 보다 많은 예비학습자들이 방문하는 행정기관 및 인터넷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특성조사·전문가 참여에 기초한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이다.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주민들에

대한 요구조사를 통해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뿐 아니라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생교육기관 교수자들간의 효율적 프로그램 운영경험과 다양한 교육방법을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 세미나와 교수들의 능력계발을 위한 연수 등이 필요하다.

넷째, 외부인력의 적극적 활용방안 모색이다. 평생교육기관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열악하여 상임교수자들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학교수, NGO관계자, 행정공무원 등 외부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정적인 외부전문가 활용을 위한 인력풀 제도를 행정기관, 대학, 충남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지역평생학습관과 연계하여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생학습추진기구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다. 평생교육기관의 애로사항으로 시설과 장비부족, 행정정책 지원 등을 들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평생학습추진 전담부서, 평생학습 추진위원회 등 추진기구를 설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소득계층이나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기술교육이나 생활안전교육 및 문해교육 등을 제공하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이다. 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주

민자치센터는 지역사회센터로서 기능을 수행해야 하고, 평생학습의 이념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평생학습도시의 중심 역할을 담당케 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제언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학습인프라 조사결과를 통해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생학습기관 인프라 진단 및 주민의 공감대 형성 후 평생학습도시 추진이다.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자치단체는 지역내에 산재한 평생학습기관에 대한 충분한 실태분석을 통해 평생학습기관의 요구사항과 문제점, 발전방안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내의 평생학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평생학습기관 인프라구축 수준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평생학습도시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지역사회주민 등 주체들간의 공감대위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될 경우 기대되는 긍정적 사회적·경제적 효과와 지역혁신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히 분석한 토대 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여군은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위해 “굿프레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수립을 위해 지역주민과 평생교육담당자(평생교육담당 공무원, 담당교사, 시민단체 평생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요구분석을 실시하였다.

주민요구분석 내용은 평생학습활동 실태, 평생학습활동을 지지하는 조건, 평생학습도시의 향후 방향 등 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평생교육담당자 요구조사 내용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평생학습도시사업 운영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둘째, 지역내 관련기관과 평생교육기관의 유기적 협력 통한 평생학습도시 추진이다.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시책이지만, 자치단체와 교육청 등 관련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역내 대학 등 학교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내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들과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기지정 평생학습도시의 성공 및 실패요인 분석을 위한 적극적 벤치마킹 추진이다. 평생학습도시로 기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이후 활발한 사업추진으로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정 이후 관리 부실 상태

인 자치단체로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평생교육 전문인력의 배치 및 활용이다.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하기 위한 자치단체는 평생교육관련 부서를 설치하고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자체적으로 취득케 하거나,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교육,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배치를 통한 노하우의 축적이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보다 양호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 분	영 역	조 사 내 용
주 민	평생학습활동실태	• 평생교육의 필요성 및 그 이유 • 평생교육 참여경험 및 참여이유 • 참여했던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프로그램 참여계획
	평생학습활동을 지지하는 조건	• 선호하는 기관 • 평생교육기관 선택시 고려요인 • 적당한 교육시간 • 선호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내용
담당자	평생학습도시 향후방향	•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 군 행정에 대한 요구사항 - 평생교육정책 대상 - 평생교육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 평생교육전문인력의 필요성 - 주민의 평생학습 지원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 •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인식	•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 중점사업에 대한 의견 및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 평생교육정책 대상 및 교육영역 • 주민의 평생학습지원시 우선사항 • 사업추진 시 애로사항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연계·협력이 현재 잘 이루어지는 영역과 가장 필요한 영역 • 네트워크 구축의 애로사항 및 지원기관의 역할
	평생학습도시 사업운영	• 지역수준의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적 주체 • 평생학습센터의 필요성 및 역할 • 전문인력 배치의 필요성 • 사업 진행에서 요구사항 및 정책제언

자료 : 부여군, 굿프레 평생학습도시 종합계획, 2005.

참고 문헌

- 광명시 평생학습센터(2001). 광명시 평생학습 도시건설5개년 계획.
- 광명시(1998. 12. 22). 광명시 평생학습센터설치및운영조례(광명시조례 제1101호)
- 군포시(1997. 10. 11)군포시 시민평생학습추진위원회조례(군포시조례 제491호)
- 김동성 외(200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연구. 경기도.
- 김득영(1998). “군포시 평생학습 추진체제의 구축과정” 한국사회교육학회, 글로벌시대의 한국사회교육학의 대응, 1998년 학술세미나 자료집.
- _____(2001). “일본의 학습도시”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소식』 2001, 가을호.
- 문화관광부(2002). www.mct.go.kr
- 부천시, 푸른부천21실천협의회(2001). 부천시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 신경희(2001). “서울시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신원득 외(2000).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경기개발연구원.
- 송두범 · 최명주(2005).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위한 평생학습인프라 실태분석”. 충남발전연구원.
- 양병찬(1999). “평생학습도시에서 지역사회교육기관과 학교의 역할.” 광명시 평생학습센터. 광명시 평생학습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자료집).
- _____(2000). “지역평생교육 공동체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전략.” 한국교육개발원 중앙평생교육센터. 지역사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제4차 지역 평생교육정보센터 관계자 워크숍 자료집).
- _____(2002). 지역을 살리기 위한 평생학습마을/도시만들기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 양병찬 · 이희수 · 김득영(2001). 군포시 평생학습도시 건설 계획. 군포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보고서.
- 열린사회시민연합(200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이용주민 · 주민자치위원 · 담당공무원 의견조사
- 진인평생학습고를추진위원회(2002). 진인평생학습고를 조성 실적 보고 자료집.
- 창원시(1995. 1. 13) 창원시평생교육원설치운영조례(창원시 조례 제 17 호)
- 충남도청 자치행정과(2004). 주민자치센터 설치현황
- 충청남도교육청(2003). 충남교육통계연보
- 행정자치부(2003). www.mogaha.go.kr
- 福留強 지음, 金得永 옮김, 평생학습마을만들기론, 대전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2003.
- 佐藤一子(1998). 生涯学習と社會參加 東京：東京大學出版會.
- 湯上二浪 編(1994). 社會教育計劃の理論 東京：日常出版.
- 尼崎市生涯學習基本計劃策定委員會,生涯學習の視點から行政を推進するために, 1990.
- Longworth, N.(1999) Making Lifelong Learning Work: Learning Cities for a Learning Century. London : Kogan Page.
- Longworth, N.(2001) Creating Lifelong Learning Cities, Towns and Regions - The Local and Regional Dimension of Lifelong Education. A European Policy Paper from The TELS Project.
- Yarrit, M.(2000) Towns, Cities and Regions in the Learning Age: A Survey of Learning Communities. London: LGA Publications for the DfEE, NCA.
- http://www.ed.gov/21stcd.c.
- http://www.lifelonglearning.co.uk/learningcities/front.htm.

충남의 통합통계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백운성 |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원

1. 문제의 제기

통계는 현재 상황과 발전과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본 정보로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비전의 제시와 정책의 수립에 필수적인 근간으로서, 기업 및 개인에게는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 기초정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즉 통계 자체적으로 객관성, 계량성이라는 기본적 속성으로 인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 계획수립, 사후평가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조직이나 개인 및 기업에 있어서 불가결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통계를 이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을 기획·수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정책의 유효성까지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업은 통계를 통해 기업환경의 변화를 포착함과 아울러 시장분석 및 기업전략의 수립, 기업성과의 계측을 위한 지표로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 개개인도 개인생활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판단의 자료로 통계를 이용할 수 있다(장석인 ·정은미, 2005).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한 국가 또는 어느 일정지역에서의 합리적인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수립은 물론, 민간기관과 학계에서도 각종 정책수립 및 업무수행에는 반드시 그에 관련된 분야의 통계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는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단위 통계로 발전되어 왔다. 그동안 정부계획의 수립과 집행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지방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및 지역에 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의 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지역개발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떠오르면서 지역단위의 통계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민선 4기 지방자치제가 출범한 현시점에서 지역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분석 및 각종 개발 계획의 수립, 집행, 관리,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